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09 / Sep. 2017

09

기획 특집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재정 논단

재정정보의 시각화와 국민소통 방안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이슈포커스

영국의 재정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예산성과 우수사례

민관 협업으로 아이들의 바른 식생활습관 개선

김기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 사무관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나라재정 배움터

재정규모와 구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작: ST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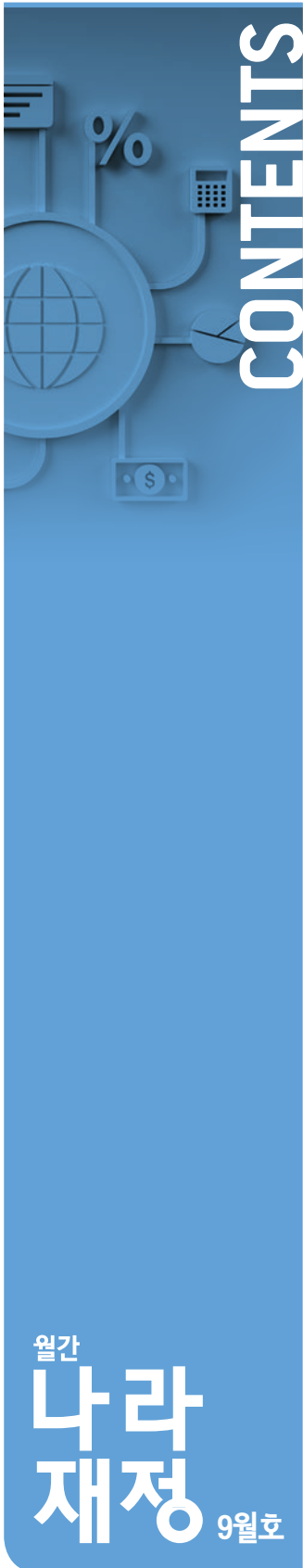


Global Finance Platform Builder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Vol.09 / September. 2017

기획 특집 06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재정 논란 14

재정정보의 시각화(visualization)와 국민소통 방안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이슈포커스 22

영국의 재정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예산성과 우수사례 30

민관 협업으로 아이들의 바른 식생활습관 개선

김기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 사무관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36

나라재정 배움터 42

재정규모와 구조

해외 재정 동향 50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60

MONTHLY

기획 특집 SPECIAL

기획 특집은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정책 방향 및 사업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06 /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eng816@korea.kr

SPECIAL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eng816@korea.kr

농촌의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 과소화
마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
정책을 마련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우리나라 농촌(읍·면)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 수준인 939만명('16년 말)으로, 최근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나 장래에 적지 않은 농촌 마을이 사라지리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듯이 면 지역 중심으로 가구 수 20호 미만인 과소화 마을의 증가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농촌은 도시와는 달리 강이나 하천을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하나의 읍·면 내에서도 여러 마을이 흩어져 있고 읍·면 소재지와 물리적 거리로 인해 농촌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등의 서비스는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특성이 다른 농촌에서 도시 형태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농촌의 주거, 복지,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또한 도시의 그것과는 차별화된 방식이 필요하다.

2013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 과소화마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중심지¹⁾ 활성화정책을 마련하였다. 읍·면 소재지뿐만 아니라 인근 배후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농촌주민들이 동등한 수준의 생활편익서비스,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선도지구로 2015년 15개 지구를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8개, 2017년 18개 읍·면 농촌중심지를 선정하였으며 지구별로 80억~120억 원(지구별 5년 이내)을 투자해 총사업비 4,120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자할 계획이다.

1) 일반적으로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시·군청 소재지를 비롯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읍·면 소재지까지를 농촌중심지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들 중심지는 농촌지역의 개발거점 기능, 서비스 중심지 기능,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결절로서 역할을 함

1. 농촌중심지의 새로운 역할 요구

농촌 과소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전략 추진

그동안 우리는 대도시 중심의 성장거점에 대한 집중투자의 효과가 점적과정(trickle down process)을 통하여 배후 농촌지역까지 전달되는 확산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기대보다 미미했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분산된 정주 형태를 갖는 농촌지역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고, 소규모 분산투자를 통한 농촌지역 모든 마을의 동등한 수준의 개발 또한 우리 농촌의 현실에서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다.

중심지든 배후마을이든 농촌 지역 어디에 거주해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배후 농촌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생활편의시설, 공공서비스를 농촌중심지 거점지구에 집중하고 배후지역에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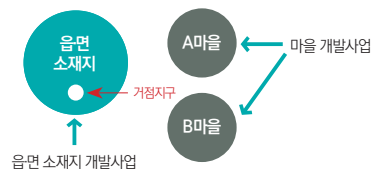
배후마을 주민을 고려한 전달체계 구축

과거의 농촌 정비사업은 농촌중심지의 위계 및 기능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왔고, 도로 및 시가지 정비 등 기반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어 농촌중심지 및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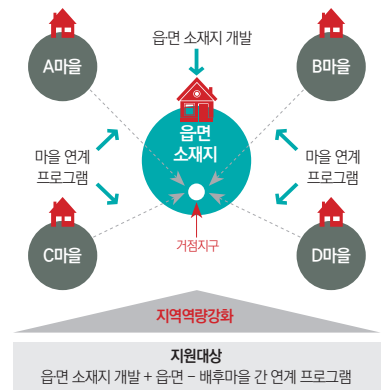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마을단위 또는 권역단위사업 위주에서 진일보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중심기능의 배후마을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농촌중심지를 이용하는 배후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배후마을과 연계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중심기능의 배후마을
전달체계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보다 진일보한 사업임

그림 1. 중심기능의 배후마을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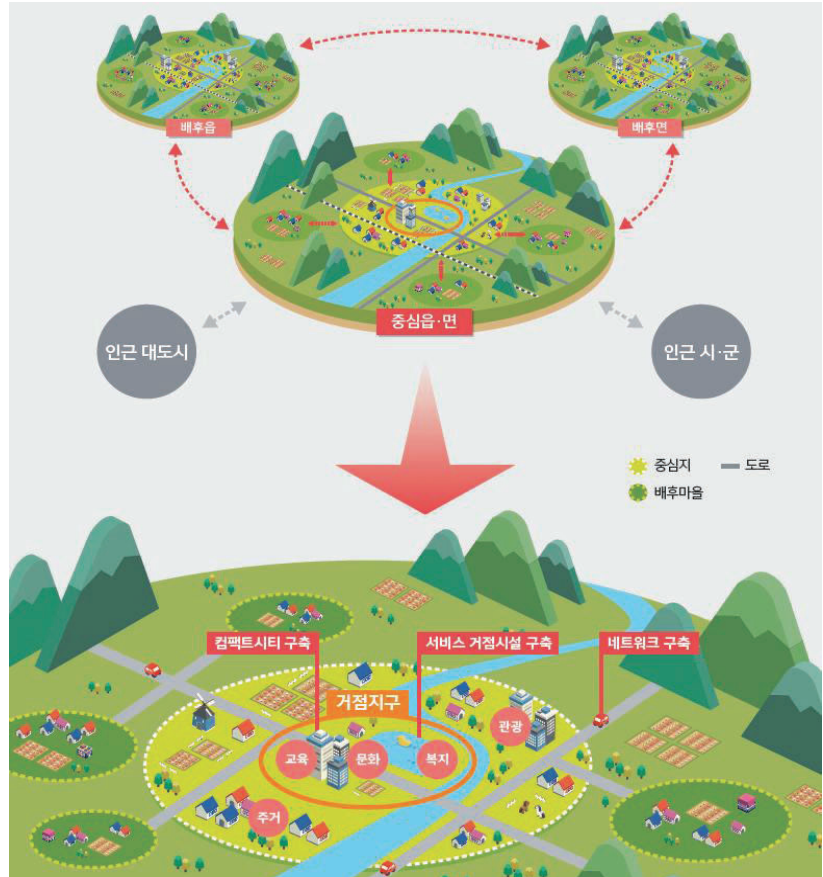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읍·면 소재지 개발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이하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2. 사회맞춤형학과 교육모델



농촌생활서비스의
충족을 위해서는
중심지 기능확충이
선결과제

2. 집중하고 전달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 생활서비스의 원활한 충족

농촌 생활서비스의 충족을 위해서는 우선 중심지 기능의 확충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읍·면 중심지들 중에서 중심지 기능의 비중이 큰 지역을 거점지구로 조성하고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 서비스의 공급 기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조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정비,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홍보할 수 있는 로컬푸드 전시 판매시설, 지역유산과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시

게가 절반에 달할 정도로 업종이 단순해졌다. 이에 금산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기회로 금산전통시장의 경제 기능 회복을 위해 시장의 노후화된 환경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미해 개선하고, 새로운 상인을 유입하는 동시에 판매업종을 다양화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창업골목’ 조성계획이다. 문화창업, 공동체창업 등을 원하는 지역의 청년과 주민을 금산전통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점포를 매입한 후 창업골목을 조성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제공하여 시장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산시장 창업·상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교육부터 창업 후 관리, 네트워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림 4. 금산군 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도

‘창업골목’을 조성하여
시장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예비창업자
들을 지원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

중심지에 집적된 시설과 프로그램, 서비스는 배후마을의 주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컴팩트 시티의 개념과 연계해서 행복꾸러미²⁾, ICT 활용 등 배후마을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등에 대한 이동수단 확보와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공공 교통네

2) 이동식 세탁소 운영, 복지셔틀버스, 고령자 장보기 대행서비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8개 소규모 복지서비스를 꾸러미로 제공

트위크 연결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비방안이 마련된다. 내년부터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 택시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은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배후마을에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동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임실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및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12개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공연, 영화 상영, 교육 등의 체감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후마을의 문화복지 향유 기회를 넓히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기면서 지역공동체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흥덕면은 행복반찬 꾸러미와 어르신 건강 돌보미 서비스 등 농촌 고령화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복반찬 꾸러미는 거동이 불편해 가사노동이 어려워 영양 상태가 열악할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마련·배달하여 식생활 여건 개선 및 말벗이 되어드리는 서비스이다. 어르신 건강 돌보미 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 건강 진단을 실시한 후,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건강 체조를 함께하는 서비스로 노인성 치매 예방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흥덕면은
농촌 고령화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할 계획

3. 맺음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역주민과 지자체,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계획, 경관·디자인, 경제, 복지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업계획을 내실화하고 정책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변화하는 농촌 여건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농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지역개발을 추진, 충분한 공공 서비스 공급 및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을 통해 중심지와 배후지역이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활력을 되찾아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MONTHLY

재정 논단 OPINION

재정 논단은 정보와 정책 진단 및 제언 등
재정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14 / 재정정보의 시각화(visualization)와 국민소통 방안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luckhee@gmail.com

OPINION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luckhee@gmail.com

주요 선진국 재정당국
에서는 ICT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전달 및
국민소통방식을 채택

재정정보의 시각화(visualization)와 국민소통 방안

재정정보와 국민소통

비행기와 같은 기계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때 조종사는 짧은 시간에 인지적 한계 속에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각종 정보를 가장 인식하기 쉽게 만든 각종 계기판을 활용한다. 비행기 작동에 필요한 정보의 특성에 따라 개별 정보는 수치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계기판에서 정보의 내용을 요약한 간명한 시각화 장치들이 이용된다. 이 경우 의사결정에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여 정보 전달과 해석과 이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신속한 판단을 위해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을 운용할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화된 국민 경제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에 해당하며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뿐 아니라 재정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재정에 관한 이해 및 해석, 신속한 판단을 위해서는 경제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가공하여 핵심적인 측면만 남기거나 요약하여 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은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정책 결정자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정정책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주요 선진국 재정당국에서는 ICT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재정정보의 전달방식에서 탈피한 다양한 정보전달 및 국민소통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회계와 예산, 중기재정계획 등이 갖고 있는 제도적 틀에서 벗어난 활용방식으로서 ICT 기반 매개체들이 실험적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재정투명성(fiscal transparency)을 확대하고 시민감사(citizen's audit) 등 새로운 형태의 재정통제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며 재정규율(fiscal rules)을 매개로 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정통제제도로 제도적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한 바 있다. 최근에 새롭게 발간되기 시작한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이나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재정동향 & 이슈'는 기존의 재정통계에 비하여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재정통계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며 최신자료를 예산주기나 회계주기와 상관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시성이 높고 정확성이 높은 재정통계를 통한 국민소통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새로 오픈한 열린재정 웹사이트(<http://www.openfiscaldata.go.kr>)의 경우 재정정보 자료의 시각화나 단순화를 시도하여 재정통계의 가시성을 높인 성공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한국의 새로운 재정통계 생산과 시각화 등의 전달방식은 주요 선진국들의 혁신적인 실험에 비하여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재정 웹사이트를 평가해보면 전반적으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어떤 사용자를 목표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부족하여 일관성 있고 효용성 높은 정보제공 측면에서 미흡하다. 단지 일반 재정회계정보를 나열하고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 '한 눈에 보이는 재정'이라는 메뉴에서 재정정보의 시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세입과 지출에 대한 기능별 분류에 머물고 있어 일반정부의 통합된 정보에 관한 정보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실험적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한국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어떤 사용자를 목표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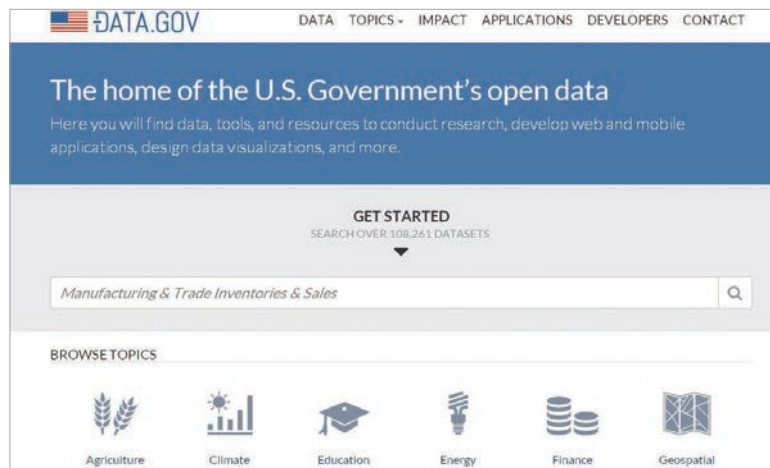
**재정의 시각화는
재정투명성, 이해용이성을
제고하고 재정정보활용의
수요자 중심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선진국의 재정정보 시각화 사례

정보의 시각화(visualization)란 어떤 대상이나 현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 도상이나 도상화, 이미지 또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각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정보 시각화는 정보의 내용 중 2~3개의 요소에 집중하여 정보를 전달한다는 특성이 있다. 먼저 어떤 요소나 기준을 표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2~3개의 핵심요소를 선택한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시각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재정정보의 시각화 및 활용에 있어서도 재정정보의 주요 이용자들의 정보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2~3개의 요소를 추출한 후 이를 중심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각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정보의 시각화는 재정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고 이해용이성(understandability)을 높이고 재정정보 활용에 있어 수요자 중심성(user-friendliness)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재정정보의 공개 및 확산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를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이들이 정보수요의 구현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포털형 재정공개 웹사이트들이 있다. 이는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일반재정정보를 한 번의 접속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를 다양한 시각화 방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포털형 사이트다. 정부가 생산하는 다양한 행정통계와 함께 재정통계도 DB 형태, 시각화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림 1. 미국 연방정부의 데이터 및 재정통계포털



둘째, 재정통계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서 여기에는 일반 재정정보보다 심층적인 재정정보를 재정의 분야별 이해관계자별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을 목표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웹사이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한 다수의 시각화 자료를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https://www.bundeshaushalt-info.de/#/2017/soll/>)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로서 기능별·성질별 예산의 내용을 시각화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으며 수입과 지출의 다양한 측면을 시각화하고 있다. 본 웹사이트는 이러한 시각화 작업을 위해 필요한 원천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민간 단체들이 보다 향상된 형태의 시각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2. 독일 연방정부의 데이터 및 재정통계포털



주요 선진국의 웹사이트를
이해관계자 및 정보수요의
구현 목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셋째, 주요 선진국에서 열린정부운동(open government movement)의 일환으로 예산, 재정정보의 원천자료를 공개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시각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들 단체들이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이자 납세자로서 시민에게 정부예산 투입 결과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운동의 일환이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시민 애플리케이션(civic application)이 채택하고 있는 접근방법으로서 정부부문의 전체 활동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서비스의 산출물

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Open Knowledge Foundation은 OpenSpending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개된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소득을 반영한 간단한 시각화 툴로서 wheredoesmymoneygo.gov를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개인의 근로소득을 특정하면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본인의 담세분의 내역을 추정하여 시각화한 모습을 제공해준다. 또한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별, 기능별 배분 등을 지도와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여 전달하고 있다. 현재 이 툴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도 한국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본 웹사이트는 예산 기능별 분류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OpenSpending의 정보가 개별거래까지 포함하면 더욱 흥미있고 가치있는 시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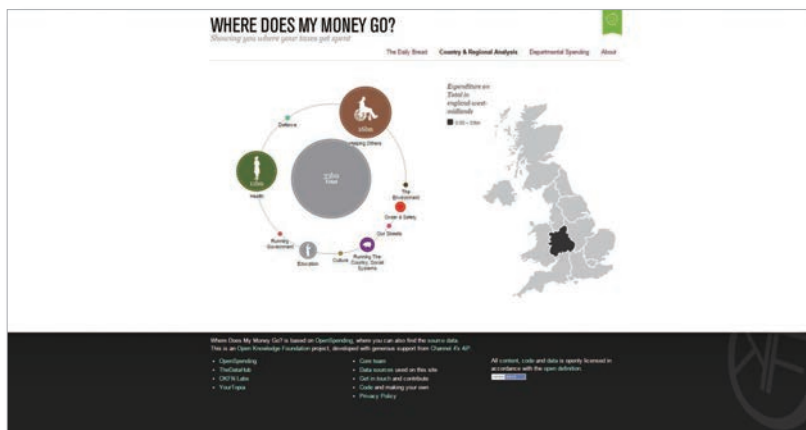
시각화를 위한
재정통계들은 납세자
또는 공공서비스
수혜자로서 시민들의
정보수요에 초점

그림 3. Open Knowledge Foundation의 재정정보 시각화 웹사이트



재정정보 시각화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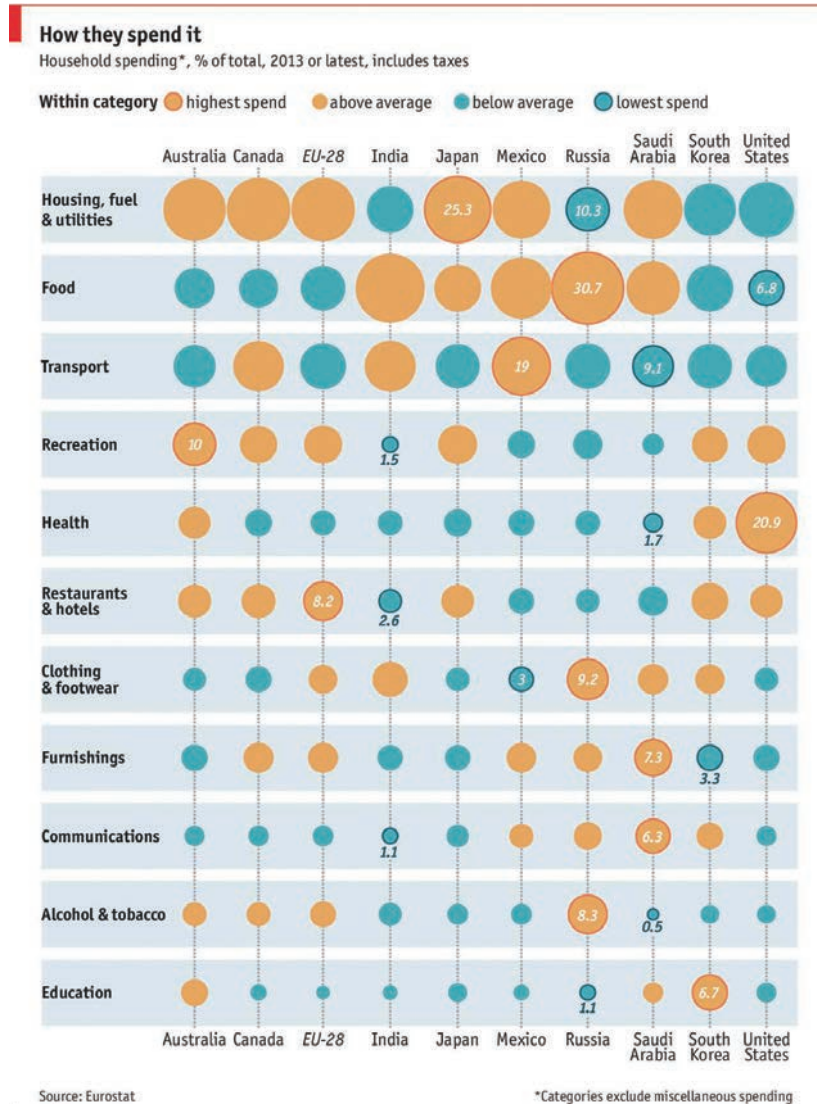
정부와 시민단체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통계 및 재정정보의 시각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적 제도개선과 원칙준수가 요구된다. 먼저 재정정보의 특성과 관련된 원칙으로 시민들에게 유용한 재정정보를 시각화한다는 목적에 맞게 기존 재정통계 측정치의 타당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재정통계들이 의회에 의한 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시각화를 위한 재정통계들은 납세자 또는 공공서비스 수혜자로서 시민들의 정보수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측정치가 생산되도록 데이터 거버넌스가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시각화의 결과가 타당성이 있



또 다른 예로 스코어보드 형태의 시각화(그림 5)로 특정분야에 특이점이 있을 경우 신호등 형태로 경고하는 방식이 있다. <그림 5>는 가구의 지출 분류에 관한 스코어보드인데 이를 재정정보에 적용할 경우 1인당 재정기능별 분류의 특이사항에 대한 시각화가 가능할 것이다. OECD가 발표한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우리나라 국무총리실이 시험 적용한 ‘국정과제 스코어보드’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림 5. 국가별 가구의 지출 범주에 관한 스코어보드

스코어보드 형태의
시각화 방식을
재정정보에 적용 가능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이차 정보의 발굴과 시각화 노력이 필요

요약하면 한국은 대국민 공공서비스별 정보제공 노력과 공공정보 활용 및 시민 앱 개발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재정회계정보 활용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시민 앱(civic application)의 강화를 위해 한국은 재정회계정보의 체계적인 개방 및 공개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정보의 시각화 및 활용의 경우 단순화된 사실의 시각화를 통한 일차적 정보(denotation information)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열린 재정이 시도하고 있는 시각화는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대한 일차적인 자료의 시각화에 머물고 있다. 향후 재정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고 심층적인 의미인 이차적인 정보(connotation information)의 발굴과 이의 시각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간적 추세, 물리적 추세에 관한 시각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재정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1. 영국의 재정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

보고서 발간 현황

영국은 조세와 급여정책이 가구 소득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명은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으로 약칭 ETB(이하 ETB)라고 부른다.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은 영국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으로 1961년 이후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최근 2017년 4월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 발간은 ① 보도자료(statistical bulletin), ② 연구방법론과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보고서(article), ③ 스프레드시트 형식의 관련 데이터(dataset)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¹⁾

사용 자료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영국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매년 약 6,000여 가구를 조사하고 있는 주거와 식생활비 조사(LCF: Living Cost and Food Survey, 이하 LCF)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2015/16년²⁾ 조사기간 동안 응답률은 약 46%이며, 조사는 개별가구에 대한 연간 조사 자료로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14일 동안 직접 방문조사하고, 7~15세 아동은 간편 조사로 대체한다. 조사에는 나이, 직업, 교육 정도, 가족 구성원, 자녀 수, 가구 형태 등 가구주와 가구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소득 형태별 소득정보, 현금급여, 소득세 부담액 등도 조사하고 있다. 표본 조사이므로 전수화 작업을 위해 나이, 성별, 지역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 LCF는 우리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와 유사하다. 매월 표본가구 면접 설문을 통해 가구특성 자료를 비롯하여, 소득과 각종 지출 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며, 2016년 연간 자료 기준으로 9,000여 가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영국은 재정정책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1961년 이후
매년 작성

【작성】

김명규 부연구위원
mkim@kpfis.kr

LCF는 『가계동향조사』보다 조사범위가 더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LCF로 분석한 ETB 현금급여 개별항목은 21개³⁾인 반면, 『가계동향조사』는 공적이전소득 항목이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 환급금 등 5개로 개별 항목에 불과하다. 또한, 유사 항목을 합산한 금액으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재정정책 효과 분석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설문항목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표 1〉 가계동향조사의 공적이전소득과 조세 등 사회보장관련 지출 항목

소득 항목	조세, 사회보장 관련 지출 항목
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 이전 세금환급금 가구 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 이전소득	비소비 지출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ETB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직접세,
간접세 항목별 효과 분석

ETB 분석 범위

이 보고서는 영국 재정정책이 가구 소득과 소득재분배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 재정정책 중 ETB 분석 범위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재정수혜(benefits) 정책과 조세(taxes) 정책이다.

조세(taxes)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크게 구분하여 효과 분석에 반영하고 있는데, 직접세 항목으로는 소득세, 지방세, 사회보험료(national insurance

1)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ersonalandhouseholdfinances/incomeandwealth/bulletins/theeffectsoftaxesandbenefitsonhouseholdincome/financialyearending2016>.

2) 영국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연간 조사기준 자료다.

3) Job seeker's allowance (Contribution based), Job seeker's allowance (Income bas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Incapacity Benefit, Income Support, Statutory Maternity Pay/Allowance, Child benefit, Taxcredits3, Housing benefit, State pension, Pension Credit, Widows' benefits, War pensions/War widows' pensions, Carer's allowance, Attendance allowance, Disability living allowance,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Industrial injury disablement benefit, Student support, Otherbenefits4

contribution) 등이며, 간접세 항목에는 부가가치세, 주류·담배·휘발유·석유·도박세, 관세 등이 있다⁴⁾. 재정수혜는 지급 방식에 따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현금급여에는 생계보조비, 구직탐색수당, 고용지원수당, 주거급여,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⁵⁾ 등이 있고, 현물급여(재화와 서비스)에는 국민건강서비스, 교육서비스, 학교급식, 주거보조, 철도이용보조, 버스이용보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자세한 항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설문 단계에서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분석 항목은 영국 분류기준과 국내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

ETB에서는 소득, 현금급여, 직접세 항목은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조사를 할 수 없는 간접세, 현물급여는 계산을 통해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면 조사 자료의 지출내역을 이용하여, 과세여부와 해당 세율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현물급여는 연령, 자녀 수 등을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의 평균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소득은 재정정책에 따라 본원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 최종소득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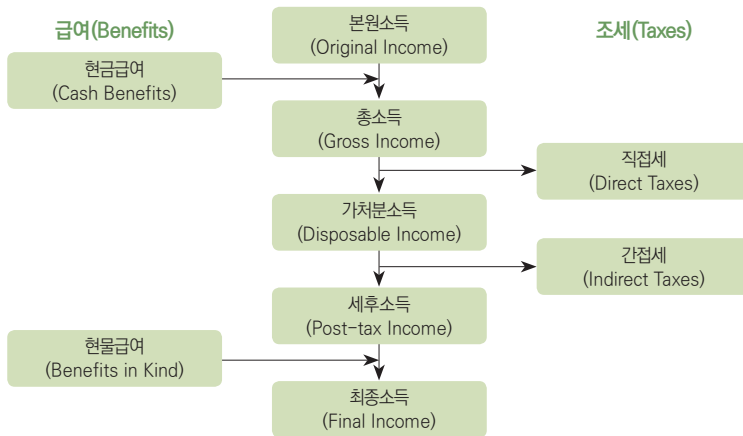
ETB 소득분류체계

영국 ETB의 소득유형은 본원소득(original income, 시장소득과 동일)에 현금급여(cash benefit)를 포함한 것을 총소득(gross income)이라 하고, 총소득에서 소득세,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것을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라 하고, 가처분소득에서 간접세를 제외한 값을 세후소득(post-tax income), 여기에 현물급여(benefit in kind)를 포함한 것을 최종소득(final income)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소득분류의 개념은 재정정책에 따라, 즉 현금급여, 현물급여를 얼마 받느냐, 직접세, 간접세를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ETB와 가계동향조사 소득 분류는 거의 유사하나 개념상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ETB에서는 국내와 달리 사적이전소득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간접세와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같은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 자동차세 등 본인이 직접내는 세금은 직접세이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ETB에서는 항목 분류상 이와 차이가 있다.

5)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 해당되나 ETB에서는 현금급여와 유사한 효과로 판단하여 현금급여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1. ETB 소득 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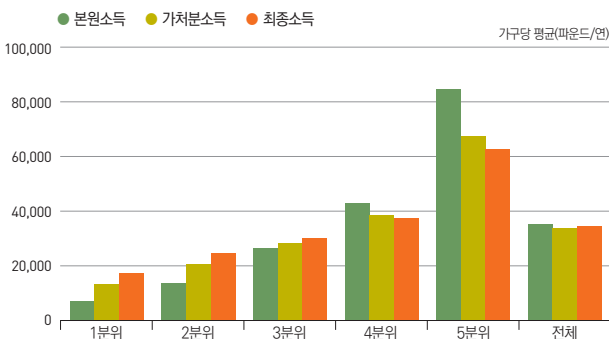
2. 영국 ETB 보고서 주요 분석 내용

소득분위별 조세 부담액, 재정수혜 수급액 분석

ETB 분석 목표는 재정정책으로 가구 소득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위별 정보는 5분위, 10분위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2016년 소득분위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조세와 재정수혜 정책으로 3분위 이하에서 최종소득이 근원소득보다 증가하고, 4분위 이상에서는 감소하여 재정정책으로 고-저소득자 간 격차완화 효과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참고). <그림 3>은 소득분위별로 조세 부담액과 재정수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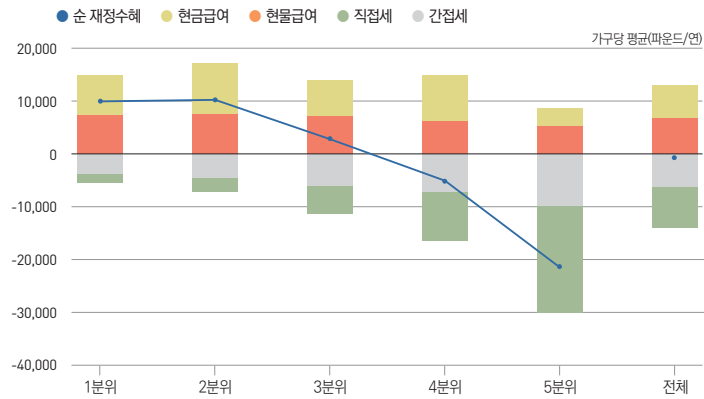
ETB에서는 재정정책이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림 2. 소득분위별 소득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7a),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16, Statistical bulletin, April 2017.

그림 3. 소득분위별 조세부담과 재정수혜 수준



※ 주 : 0 아래는 조세 부담 수준, 0 위는 재정수혜 수준을 의미함. 파란 점은 순 재정수혜를 의미하며,
순 재정수혜 = 재정수혜 - 조세 부담

자료 : ONS(2017a).

소득재분배 지표를 활용하여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ETB 보고서의 핵심은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이다. 재정 정책별로 분위별 소득에 미치는 효과로 과연 얼마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정책집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다.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적인 분석을 위한 로렌즈곡선을 비롯해, 소득재분배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5분위 배율(또는 10분위 배율)을 이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소득재분배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가구들의 소득 수준을 표준화하여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동등화(equivalence)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니계수⁶⁾를 통한 분석 결과, 본원소득의 지니계수는 49.3에서 세후 소득은 35.4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원이 적은 은퇴 가구는 지니계수(본원소득 59.9 → 세후소득 32.5)가 비은퇴자 지니계수(본원소득 43.3 → 세후소득 35.4)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서 은퇴자의 재정수혜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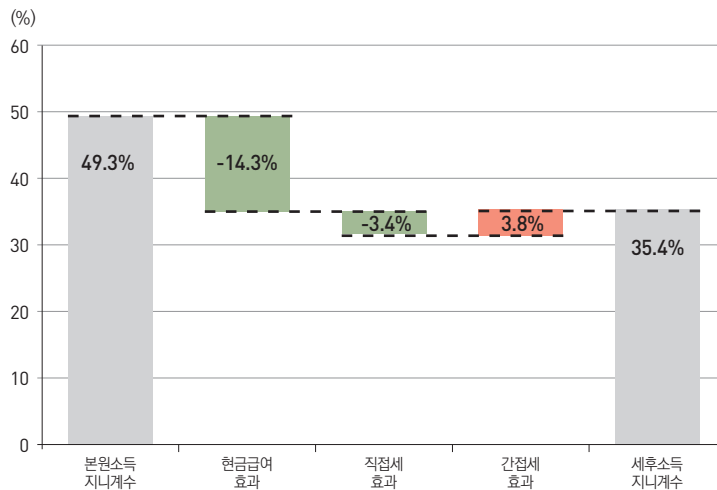
6)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평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불공평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ETB에서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0에서 100사이의 값을 가진다.

〈표 2〉 2016년 ETB 소득 종류별 지니계수 비교

구분		전체 가구	비은퇴 가구	은퇴 가구
지니계수	본원소득(A)	49.3	43.3	59.9
	총소득(B)	35.0	34.9	30.1
	가처분소득(C)	31.6	31.7	28.2
	세후소득(D)	35.4	35.4	32.5
Kakwani 지수	현금급여효과(B-A)	-14.3	-8.4	-29.8
	직접세효과(C-B)	-3.4	-3.2	-1.9
	간접세효과(D-C)	3.8	3.7	4.3

자료 : ONS(2017a), 결과를 이용하여 재작성.

그림 4. 현금급여와 조세가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



자료 : ONS(2017a).

재정정책 중
현금급여가 소득재분배에
가장 효과적

재정정책의 누진도 분석을 통한 정책 평가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분배지표의 소득 단계별 차이로 방향성과 크기로 분석하는데, 이를 재정정책의 누진도 분석(progressiveness analysis)이라고 한다. 재정수혜와 조세가 소득재분배를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효과를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인가, 저소득층에게 재정수혜가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인가를 분석함으로써 재정정책 효과의 귀착이 정책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금급여의 정책효과는 본원소득 지니계수를 구하고, 본원소득에 현금급여를 포함한 총소득 지니계수와와의 차이를 통해 분석한다. 직접세의 정책효과는 총소득 지니계수와 총소득에서 직접세를 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를 통해 분석한다. 간접세의 정책효과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에서 간접세를 뺀 세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를 통해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Kakwani(1977)가 고안한 지표가 Kakwani index이며, $K < 0$ 이면 누진적 정책이고, $K = 0$ 이면 비례적, $K > 0$ 이면 역진적 정책임을 의미한다.

- 현금급여 정책효과 $K = \text{총소득 지니계수} - \text{본원소득 지니계수}$
- 직접세 정책효과 $K = \text{가처분소득 지니계수} - \text{총소득 지니계수}$
- 간접세 정책효과 $K = \text{세후소득 지니계수} - \text{가처분소득 지니계수}$

현금급여와 직접세가 누진적 재정정책이며, 간접세는 역진적 재정정책

ETB에서 영국 재정정책에 따른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결과, 현금급여와 직접세는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간접세는 다소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금급여 정책은 본원소득 대비 14.3%p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있으며, 직접세는 3.4%p 개선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반면, 간접세는 3.8%p 소득재분배 악화를 가져와 역진적이었다(〈표 2〉, 〈그림 4〉 참조).

소득재분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금급여 중 세부 항목의 효과도 분석하고 있다. 누진도가 가장 큰 항목은 주거 급여(housing benefit)이며, 소득보조 또는 연금세액공제(income support or pension credit), 고용지원 수당(employment & support allowance), 구직탐색수당(job seekers allowance) 등의 순이었다(〈그림 5〉의 녹색 그래프). 본원소득 대비 현금급여 비중을 보면, 주(state) 연금 급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의 주황색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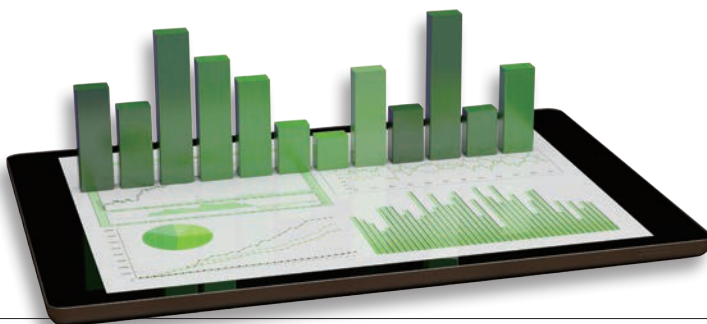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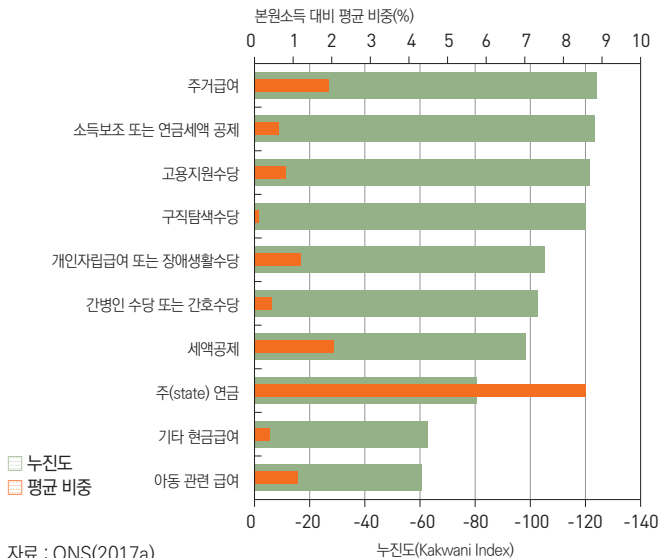


그림 5. 현금급여의 누진도 분석



자료 : ONS(2017a).

이와 같이 영국 정부는 재정정책이 가구 소득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TB 보고서의 활용

영국의 ETB 보고서는 영국 재무부, 관세청, 노동연금부 등 중앙 정부기관이 재정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정책 변화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여 예산 편성 과정이나 사전예산서(Autumn Statement)⁷⁾ 작성에도 활용하고 있다.

7) 사전예산서는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재무부가 11월말~12월초에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경제·재정 전망 변화, 새로운 정책의 소개, 세율 변동에 대한 사전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문헌

- 통계청(2017), 『가계동향조사』.
- Kakwani, Nanok C.(1977),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 Journal, Vol. 87, Issue 345, pp.71-80.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6),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methodology and coherence: financial year ending 2015, Article, May 2016.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7a),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16, Statistical bulletin, April 2017.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7b), Living Costs and Food Survey Technical Report for survey year: April 2015 to March 2016, February 2017.

영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변화의 효과를
사전 분석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김기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 사무관
gskim7155@korea.kr

민·관 협업으로 아이들의 바른 식생활·식습관 개선

- 시간 : 2017년 8월 25일 오후 2시
- 장소 :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의 수익 환원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최근에는 더욱 진보한 개념으로서 기업이 사회에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을 추구하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d)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와 같은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도 일부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행위로 폄하하기도 한다. 최근 민간기업 (주)휴롬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영·유아 어린이 식생활 교육’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나아가 CSV를 실천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성과를 낳았다. 정부 입장에서 필요 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민·관 간 윈윈(win-win)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김기성 사무관을 만나 민·관 협업 사업의 추진배경 및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 김기성 사무관입니다. 2015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 식생활 소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어린이의 식생활·식습관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 6월부터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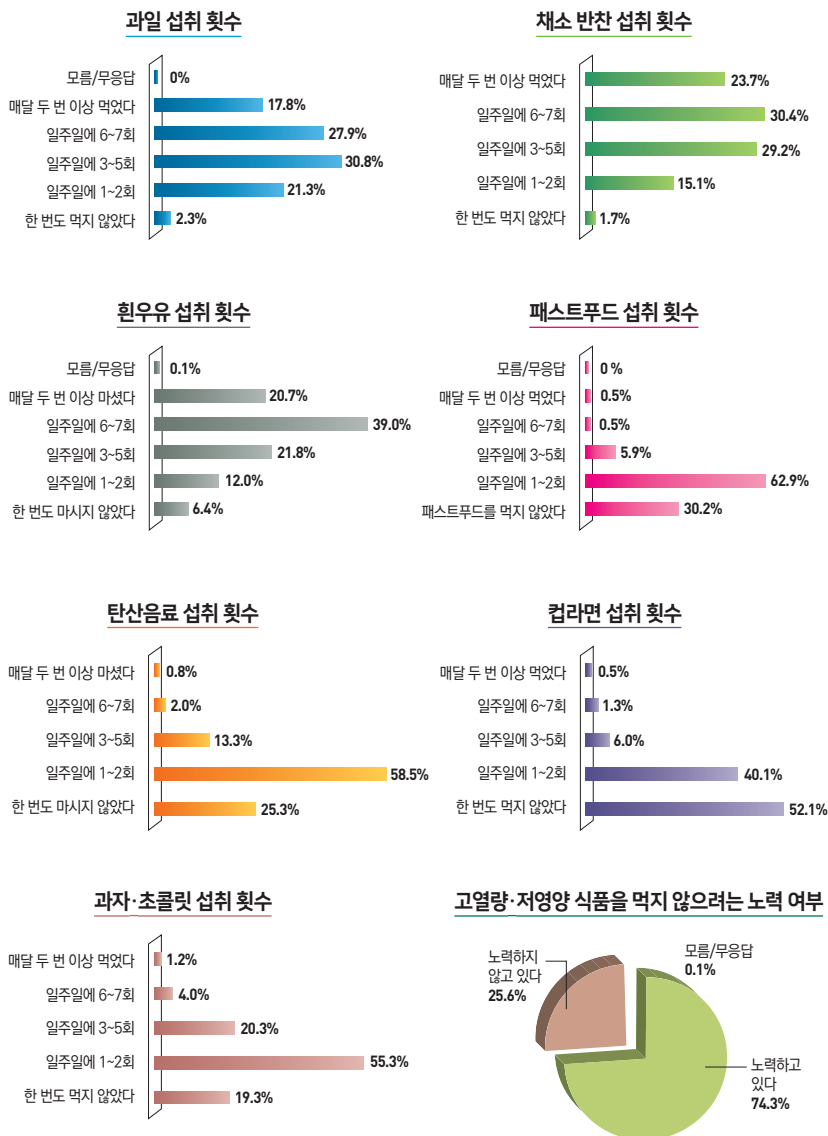
A. 영·유아기에 형성된 식생활 및 식습관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므로 이 시기의 바른 식생활·식습관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아의 60.4%~70.7%가 편식, 영양불균형 심화, 비만 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

【인터뷰】

김도일 연구원
doylek@kpfis.kr

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6조 7천억 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80%가 과일·채소 권장 섭취량 이하를 소비하고 있고, 국민의 57.1%가 비타민 C 부족을 겪고 있는 등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 식생활 개선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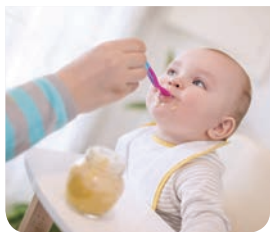
그림 1. 어린이 식생활환경 조사 결과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영양학회 공동 조사(2012)

영유아 어린이의 바른
식생활습관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이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영유아 어린이
대상 미각교육을 실시

하지만 교육에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 등 어린이 대상의 식생활 교육 관련 정부투자자는 미미한 수준이며,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사업 또한 일회성·단순·소규모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영·유아의 바른 식생활 실천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영·유아의 식생활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 영·유아 어린이 식생활 교육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A. 다양한 세부 사업들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어린이 미각교육, 과일·채소 효능 관련 대국민 임상실험 프로젝트, 국산 과일 소재 창작동화책,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보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 미각교육은 민간기업인 (주)휴롬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된 사업입니다. (주)휴롬은 과일, 채소를 이용한 착즙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휴롬의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식생활·식습관 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들이 착즙 음료를 만들고 마시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과당 과즙이 포함된 음료와의 차이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체험행사에 필요한 연간 40톤 규모의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국내 농가 소득 향상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습니다.

그림 2. 어린이의 미각교육



둘째, 과일·채소 효능 관련 대국민 임상실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평소 과일·채소 섭취량이 적고 과체중, 비만 자녀의 체중감량과 체질개선, 식습관 변화 등을 희망하는 22가족 44명을 선발하여 임상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21일 동안 실험으로 제공되는 착즙한 천연주스를 마시는 등 임상

실험을 수행한 결과, 비만 원인균으로 알려진 페르미쿠테스(Firmicutes) 문(門)이 차지하는 비율이 천연주스를 마시기 이전 41.3%에서 이후 21.8%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림 3. 어린이집 식생활교육 교재



그림 4. 과일·채소 소비촉진 창작 동화책



셋째, 토마토, 딸기와 같은 국산 과채류를 소재로 한 교구, 교재를 만들어 보급하여 어린이집, 학부모, 아이들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밖에도 창작 노래와 율동, 어린이 과일·채소 포스터, 어린이 애니메이션 등의 개발·보급을 통해 영·유아 식생활·식습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대국민 임상실험, 교육
교재와 애니메이션 등의
개발보급을 통해
영유아 어린이 식생활·
식습관 교육에 기여

그림 5. 과일·채소 소비 촉진 포스터



(성인용)



(어린이용)

민간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사회적책임경영을
하는 경우 사업수행이
용이하고 성과가 극대화
되는 등 이점이 존재

Q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기업인 (주)휴롬과 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과거 (주)휴롬은 연고지인 경남 김해지역, 부산지역에서 작게나마 사회적책임경영(CSR)의 일환으로 식생활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간 기업이 CSR을 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팔기 위한 활동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폄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함께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원장, 보육교사가 사업 내용이나 목적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와 협업을 하면, 독자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생기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한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업이 민간과 협업의 물꼬가 되어 이후 식생활교육 유사 사업인 “농촌 고령자 식생활·건강 개선 사업”의 농식품 식재료 제공 등에 홈플러스 e-파란재단, 유동골뱅이 등의 ‘기업체’,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등의 ‘단체·협회’, 지자





체, 지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등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재정절감 등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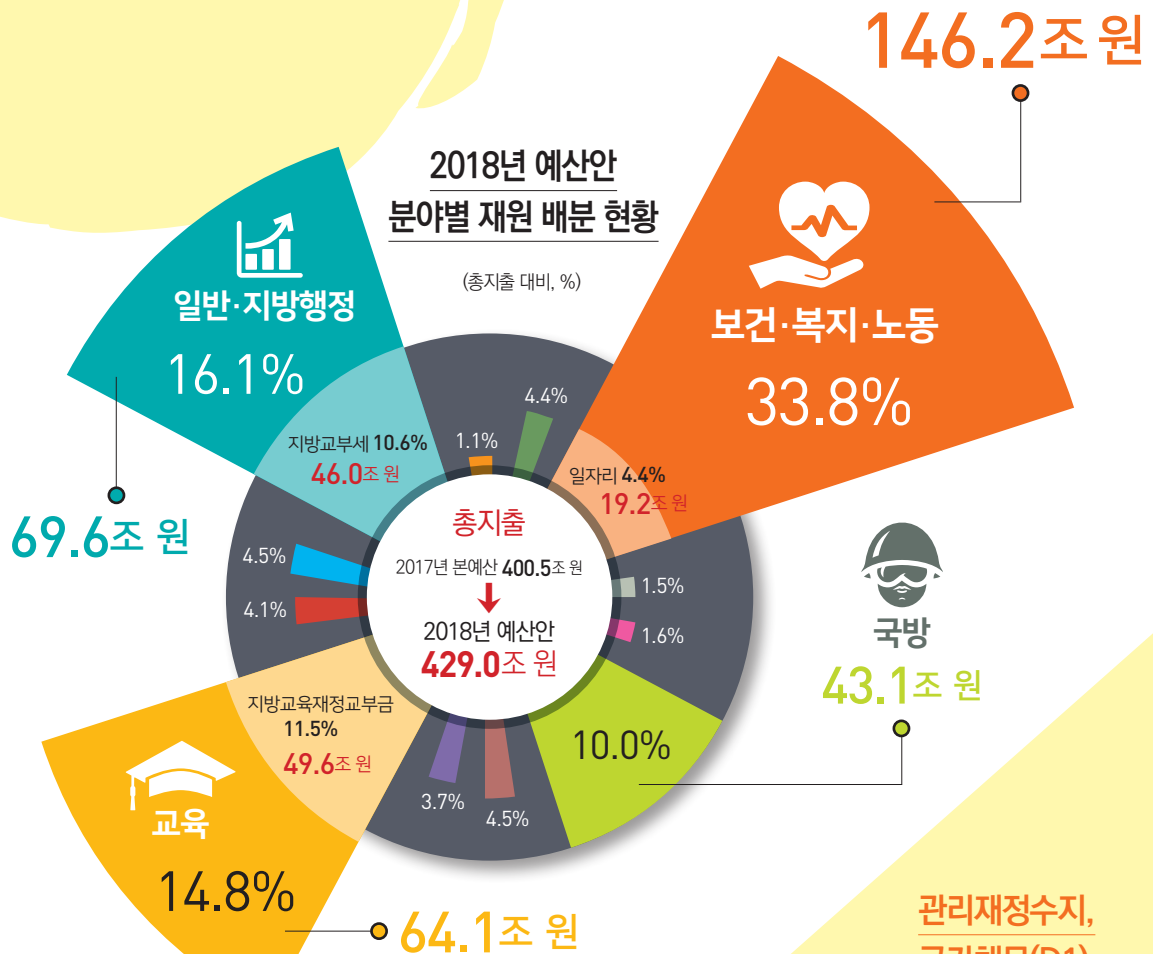
A. (주)휴롬으로부터 12억의 사회공헌 투자금을 유치하고,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절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절감한 예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규 사업을 구상할 수 있고, 기업들은 정부와 함께하는 다양한 CSR, CSV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개관 예정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에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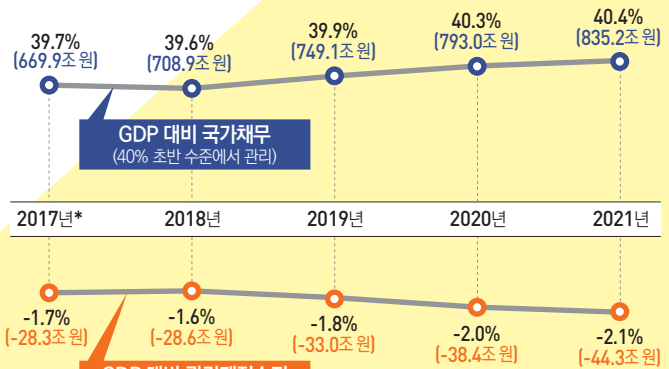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어린이 대상의 사업 등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현재 제가 속한 팀에서는 2020년 개관을 목표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역사관이나 농업체험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농업·농촌 관련 전시·체험·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 및 잠재력을 알리는 통합적 문화공간으로 전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예·산·안 알아보기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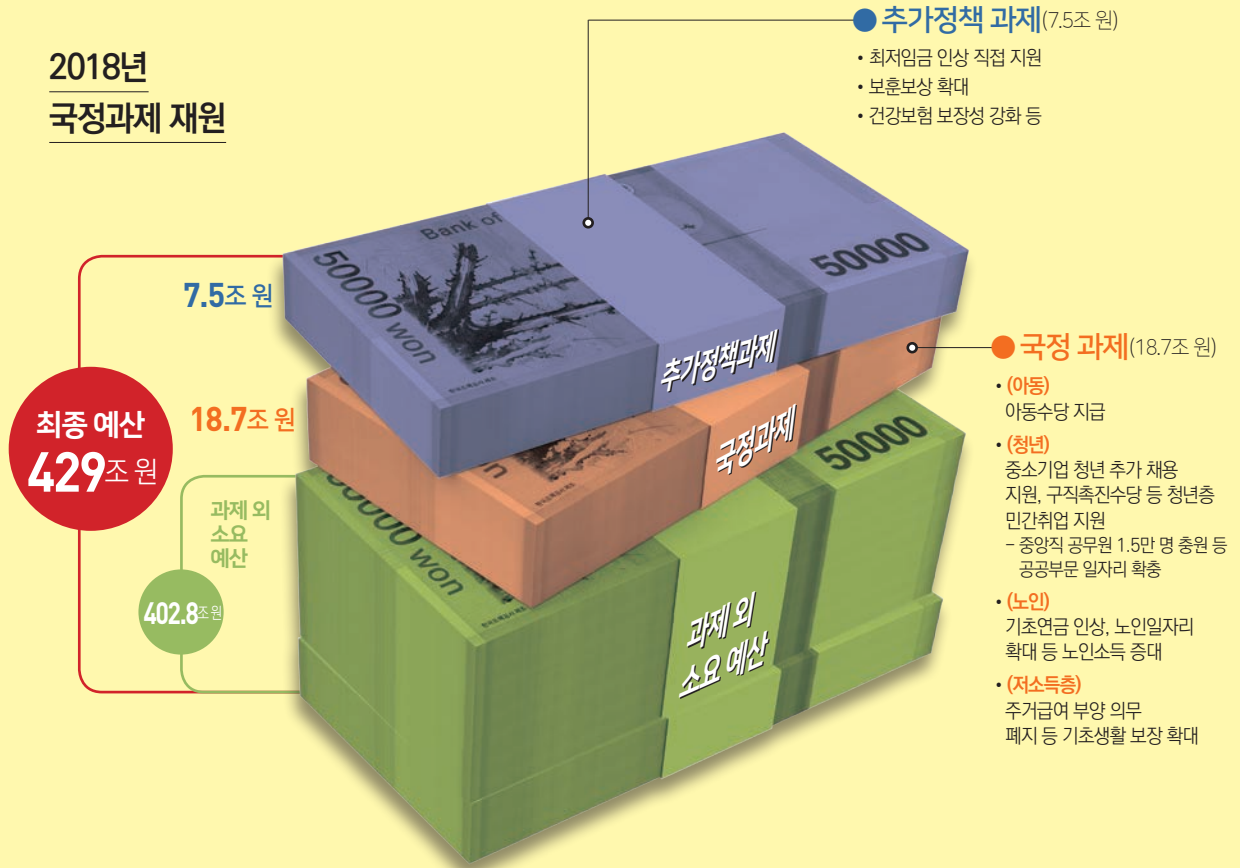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2017.8.)

※주 : 12개 분야의 합은 총지출 합과 다름
(R&D예산이 다른 분야와 중첩됨)

* 관리재정수지 : 2017년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 2017년 추경안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201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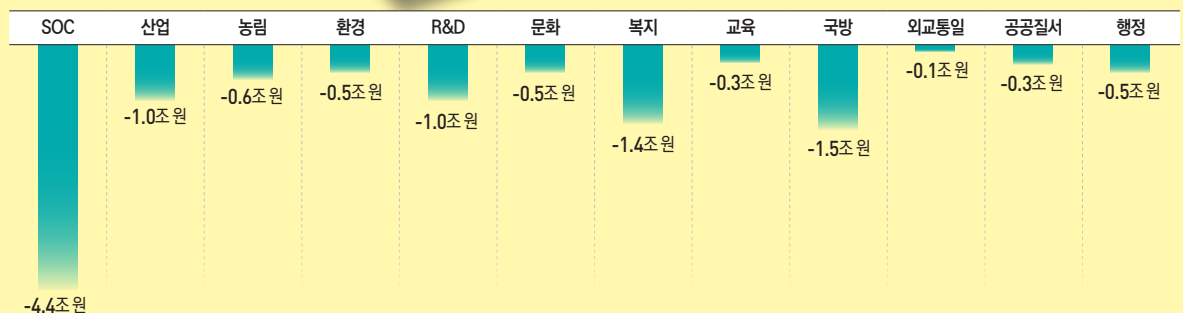
2018년 국정과제 자원



2018년 지출구조조정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결과〉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1. 2018년도 예산안의 재정총량

정부는 사람중심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본예산 대비 28.4조 원(7.1%) 증가한 총지출 기준 429.0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32.8조 원 증가(7.9%)한 447.1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¹⁾는 2017년 대비 흑자 폭이 증가한 18.1조 원 흑자다.

**2018년 총수입은
447.1조 원,
총지출은 429.0조 원**

〈표 1〉 2018년 예산안 총지출, 총수입 및 통합재정수지

(단위 : 조 원, %)

구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
	본예산(A)	추경			
총지출(D)	400.5	410.1	429.0	28.4	7.1
예산	274.7	280.3	295.0	20.4	7.4
기금	125.9	129.8	133.9	8.1	6.4
총수입(C)	414.3	423.1	447.1	32.8	7.9
예산	268.7	277.5	294.9	26.2	9.8
국세수입	242.3	251.1	268.2	25.9	10.7
기금	145.6	145.6	152.2	6.6	4.5
통합재정수지 (C-D)	13.8	13.0	18.1	4.3	

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2017. 8.)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다소 개선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28.6조 원(GDP 대비 1.6%) 적자이나, 2017년 대비 0.3조 원 개선되어 GDP 대비 적자 비중은 0.1%p 감소되었다. 국가채무는 708.9조 원으로 2017년 대비 39조 원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로는 0.1%p 개선되었다.

【작성】

김명규 부연구위원
mkim@kpfis.kr

김상기 연구원
sgkim@kpfis.kr

조현희 연구원
hyunheecho@kpfis.kr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으로 정의한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전체 재정규모, 내부거래액과 보전거래액을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표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

(단위 : 조 원, %)

구분	2017년 본예산(A)	2018년 예산안(B)	증감(B-A)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중)	-28.3 (-1.7)	-28.6 (-1.6)	-0.3 (0.1%p)
국가채무 (GDP 대비 비중)	669.9* (39.7)	708.9 (39.6)	39.0 (-0.1%p)

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2017. 8.)

* 추경안 기준

2. 분야별 자원 배분 현황

2018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2조 원(총지출 대비 34.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교육 분야는 64.1조 원(총지출 대비 14.9%)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2017년 본예산 대비 가장 큰 폭(12.9%)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SOC 분야는 2017년 대비 20.0%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문화·체육·관광,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2017년보다 감소하였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2.8조 원이 편성되었고, 신혼부부 용 공공임대주택 1만 호 확대 등 주택 지원을 위해 23.9조 원이 편성되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30만 원씩 3개월간) 등 일자리 관련 사업에도 19.2조 원이 편성되었다.

교육 분야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6조 원 등 유아·초·중등교육을 위해 53.7조 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층의 해외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6만 달러씩 50명 선발) 확대 등 고등교육에 9.6조 원이 편성되었다.

SOC 분야는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171억 원, 신규) 등 재해 예방 및 생활 밀착형 안전투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전년보다 0.1%p씩 개선**

자는 확대되었으나, 일반 철도(2.4조 원 감소)와 국도(0.9조 원 감소) 건설 투자는 축소 편성되었다.

〈표 3〉 분야별 자원 배분

(단위 : 조 원, %)

구분	2017년 본예산(A)	2018년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
총지출	400.5	429.0	28.4	7.1
1. 보건·복지·노동	129.5 (32.3)	146.2 (34.1)	16.7	12.9
일자리	17.1 (4.3)	19.2 (4.5)	2.1	12.4
2. 교육	57.4 (14.3)	64.1 (14.9)	6.7	1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9 (10.7)	49.6 (11.6)	6.6	15.4
3. 문화·체육·관광	6.9 (1.7)	6.3 (1.5)	-0.6	-8.2
4. 환경	6.9 (1.7)	6.8 (1.6)	-0.1	-2.0
5. R&D	19.5 (4.9)	19.6 (4.6)	0.1	0.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4.0)	15.9 (3.7)	-0.1	-0.7
7. SOC	22.1 (5.5)	17.7 (4.1)	-4.4	-20.0
8. 농림·수산·식품	19.6 (4.9)	19.6 (4.6)	0.02	0.1
9. 국방	40.3 (10.1)	43.1 (10.0)	2.8	6.9
10. 외교·통일	4.6 (1.1)	4.8 (1.1)	0.2	5.2
11. 공공질서·안전	18.1 (4.5)	18.9 (4.4)	0.8	4.2
12. 일반·지방행정	63.3 (15.8)	69.6 (16.2)	6.3	10.0
지방교부세	40.7 (10.2)	46.0 (10.7)	5.3	12.9

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2017. 8.)

※주 : 12개 분야의 합은 총지출 합과 다름(R&D예산이 다른 분야와 중첩됨). 괄호는 총지출 대비 비중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46.2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34.1% 차지



3.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 등 현재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과 세제 개혁도 병행하여 향후 5년간 재정수입은 연평균 5.5% 증가하고 재정지출은 연평균 5.8% 증가하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 적자 수준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는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향후 5년 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5.5%
재정지출 증가율은 5.8%
예상

〈표 4〉 향후 5년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 조 원,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수입	423.1	447.1	471.4	492.0	513.5	5.5
국세수입	251.1	268.2	287.6	301.0	315.0	6.8
재정지출	410.1	429.0	453.3	476.7	500.9	5.8
(증가율)	(6.1)	(7.1)	(5.7)	(5.2)	(5.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중)	-28.3 (-1.7)	-28.6 (-1.6)	-33.0 (-1.8)	-38.45 (-2.0)	-44.3 (-2.1)	
국가채무 (GDP 대비 비중)	669.9 (39.7)	708.9 (39.6)	749.1 (39.9)	793.0 (40.3)	835.2 (40.4)	

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2017. 8.)

*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 추경확정 기준

관리재정수지 : 본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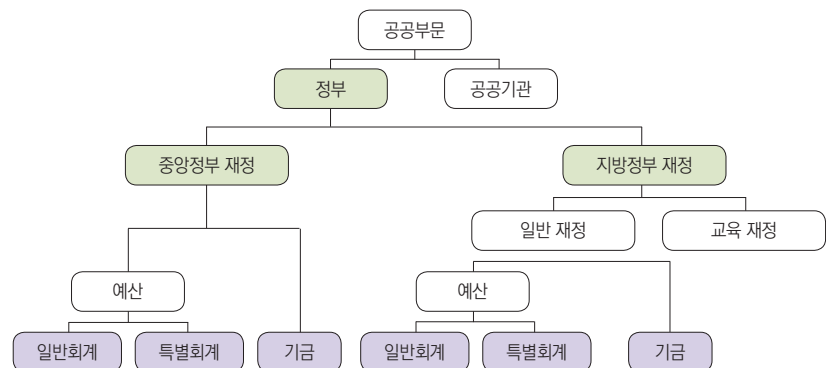
국가채무 : 추경안 기준

재정규모와 구조

Q1 공공부문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공기관과 정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개념으로 볼 때,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크게 구분됩니다. 지방정부는 다시 지방정부와 교육재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림 1. 우리나라 재정의 분류



공공부문은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분류



【작성】

김명규 부연구위원
mkim@kpfis.kr

Q2 중앙정부 재정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중앙정부의 재정은 크게 예산(budget)과 기금(fund)으로 구분하고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됩니다. 일반회계는 중앙정부의 예산의 중추를 구성하며, 기본적인 정부활동과 관련된 주요 재정사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회계를 말하며, 2017년 기준으로는 19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과 독립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됩니다. 기금은 총 67개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기금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특정자금입니다.

Q2.1 예산과 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산과 기금을 자세히 보면, 국가 고유의 사업 등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이유, 운용형태, 수입과 지출 간 연계, 확정절차, 집행절차, 계획변경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설치사유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국가고유의 일반 재정활동을 위해 설치한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형태는 일반회계는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운용하며, 기금은 목적사업별 출연금과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이 혼용된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는 반면, 일반회계는 수입과 지출이 연계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부처의 예산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을 편성한 다음 국회 심사·의결로 확정되는 반면,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후 기금운용주체와의 협의 과정 후 국회 심사·의결로 확정됩니다.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예산은 법적 절차에 의해 엄격히 통제됩니다. 반면, 기금은 계획변경 시 사업성 기금은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초과 변경 시에만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등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부르는 용어에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입을 세입이라고 지칭하며, 지출은 세출이라고 부릅니다.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산과 기금은
설치이유, 운용형태,
확정절차, 집행절차,
계획변경에서 차이**

〈표 1〉 예산과 기금의 비교

구분	예산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사유	•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 사업 운용 • 특정 자금 운용 •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충당	•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운용형태	• 조세 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
수입·지출 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확정절차	• 부처의 예산 요구 •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 국회의 심사·의결로 확정		• 기금관리주체의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 기획재정부 장관과 운용주체 간의 협의·조정 • 국회의 심사·의결로 확정
집행절차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 목적 외 사용금지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계획변경	• 추경예산 편성 • 이용·전용·이체		•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 시 국회 의결 필요 (금융성 기금의 경우 30%)
결산	국회 심사·의결		

자료 :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추경기준
2017년 총수입은
423.1조 원, 총지출은
410.1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3조 원 흑자

Q2.2 중앙정부재정의 규모는 얼마인가요?
예산과 기금을 합한 2017년 중앙정부 총지출(추경 기준)은 410.1조 원으로 2016년 398.5조 원 대비 2.9% 증가한 수준입니다. 예산은 280.4조 원으로 대부분 일반회계(229.8조 원)이며, 기금은 129.8조 원입니다.

총수입(추경 기준)은 2017년 423.1조 원으로 2016년 401.0조 원 대비 5.5% 증가한 수준입니다. 예산 수입은 국세 세입이 251.1조 원이며, 세외수입이 26.4조 원으로 총 277.5조 원입니다. 나머지 기금 수입은 145.6조 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인데, 당해 연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합니다.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6.7조 원 흑자를 기록한 이래 2015년 0.2조 원 적자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표 2〉 중앙재정규모

(단위 : 조 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률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총수입(C)	391.2	401.0	414.3	423.1	5.5
- 예산	250.1	259.9	268.7	277.5	6.8
• 국세	222.9	232.7	242.3	251.1	7.9
• 세외수입	27.2	27.2	26.4	26.4	-2.9
- 기금	141.1	141.1	145.6	145.6	3.2
총지출(D)	386.4	398.5	400.5	410.1	2.9
- 예산	263.9	271.3	274.6	280.4	3.4
• 일반회계	214.6	221.7	224.4	229.8	3.7
• 특별회계	49.3	49.6	50.2	50.6	2.0
- 기금	122.5	127.3	125.9	129.8	2.0
통합재정수지 (C-D)	4.8	2.5	13.8	13.0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회 확정 예산), 2017. 8. 28.

재정건전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활용

Q3 재정규모를 보여주는 다른 재정수지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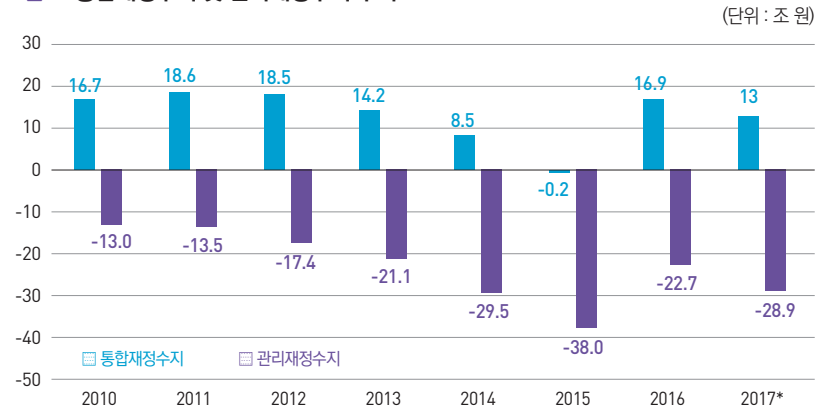
사회보장성 기금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므로, 재정건전성의 여부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여 관리재정수지를 구합니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금기금을 말합니다.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관리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2010년 13.0조 원 적자를 기록한 이래 점차 그폭이 증가하여 2015년에는 38.0조 원 적자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으로 바뀌었고 2017년에는 28.9조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림 2.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추이



※주 : * 2017년은 추정예산 기준 자료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결산), 2017. 8. 25.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추경), 8월호

국가채무는 재정건전성을
보는 핵심지표로,
포괄범위에 따라
세 개 지표로 작성

Q4 국가채무는 무엇인가요?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을 의미하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입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 및 국제비교 등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회계·기금(지방정부 순채무)을 포함한 국가채무(D1)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국제지침에 의한 일반정부 부채(D2=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와 공공부문(D3=D2+비금융공기업 부채)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 관리 목표 설정 등에,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에, 공공부문 부채(D3)는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됩니다.

〈표 3〉 국가채무 유형별 개념 및 비교

유형	포괄 범위	산출 근거	회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	D2+비금융 공기업	국제 기준 (PSDS)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 공공기관	국제 기준 ('01 GFS, PSDS)	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교육)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86 GFS)	현금주의

자료 : 기획재정부(2014), 「2013 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Q5 지방정부 재정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지방정부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구분하고 있고, 2017년 기준 지방정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시·군·구 중 192개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은 17개 시·도의 교육에 관한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Q5.1 지방정부재정의 규모는 얼마인가요?

지방정부 일반재정은 2016년 수입은 165.4조 원이며, 2015년 157.0조 원 대비 8.4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정부 수입을 분류해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87.3조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2.8%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5.0조 원 규모로 지방교부세는 32.0조 원, 국고보조금은 43.0조 원 규모입니다. 지출 규모는 당초 기준으로 2016년 179.9조 원이며, 2015년 168.1조 원 대비 11.8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세출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62.0조 원이며, 교원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수입은 중앙정부 재정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과 자체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2016년 지방정부재정
지출규모는 179.9조 원,
수입은 165.4조 원,
지방교육재정은 62조 원임**

〈표 4〉 지방정부 일반재정수입·지출 현황

(단위 : 조 원, %)

	구분		2015		2016		증감	
			당초(A)	최종	당초(B)	비중	B-A	(B-A)/A
지방정부	수입	자체재원	80.3	90.3	87.3	52.8	7.0	8.8
		의존재원	73.4	78.0	75.0	45.3	1.6	2.2
		융자회수 등	3.3	4.6	3.1	1.9	-0.2	-6.3
		합계	157.0	173.0	165.4	100.0	8.4	5.4
	지출		168.1		179.9		11.8	7.0
지방교육	세출규모		59.7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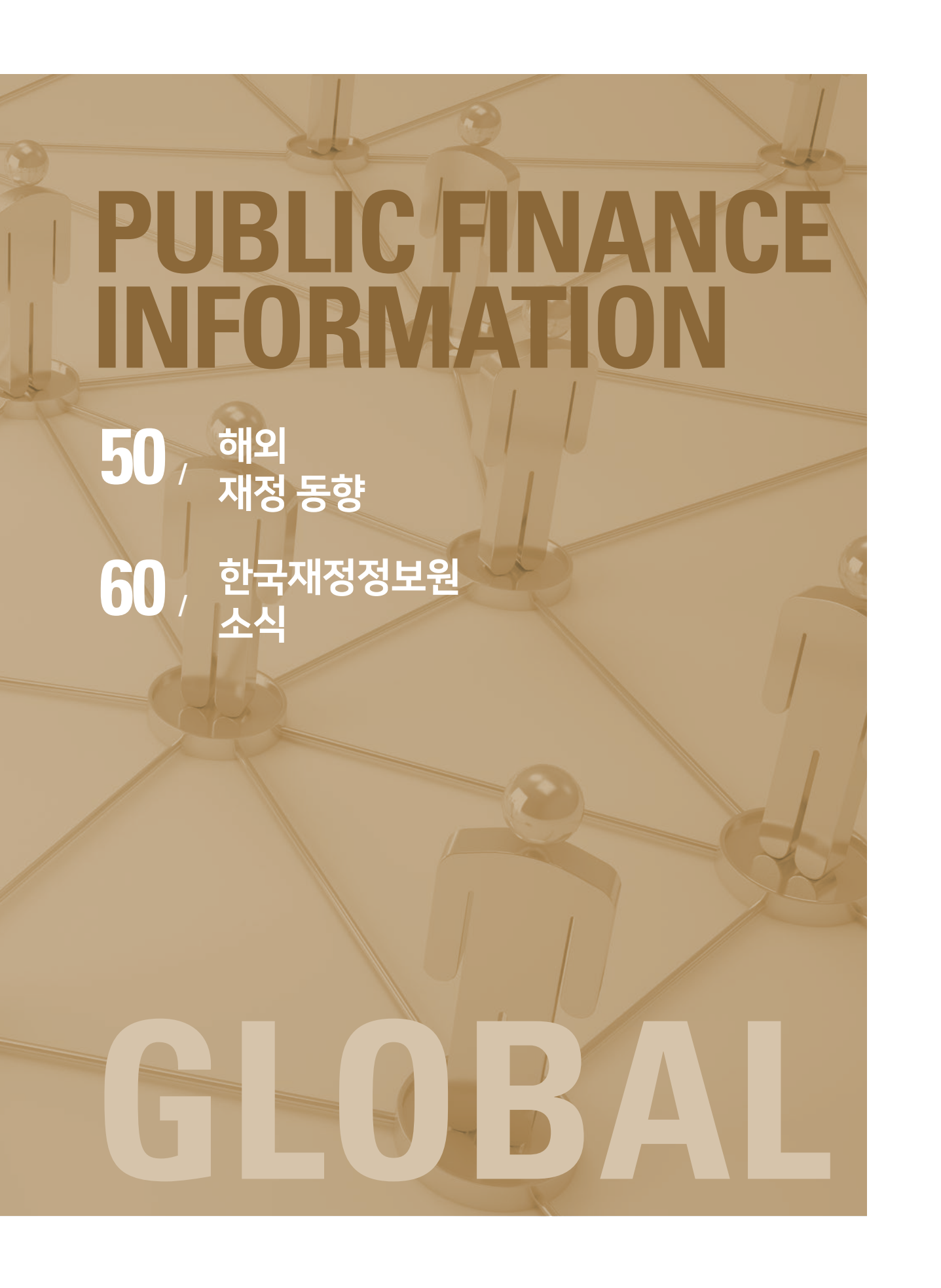
자료 : 행정자치부(2016),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MONTHLY

동향과 소식

GLOBAL FISCAL TRENDS & KPFIS NEWS

해외 재정 동향과
한국재정정보원의 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50 / 해외
재정 동향

60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GLOBAL



해외 재정 동향

해외 재정 동향

뉴질랜드, 재정전략보고서 발간

- Minister of Finance¹⁾, Fiscal Strategy Report (2017. 5. 25.)

• 발간 목적 및 배경 •

재정책임법(The Fiscal Responsibility Act 1994)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관리 원칙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보고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정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임. 이 법에는 재정전략보고서의 내용,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재무부장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즉시 재정전략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재정전략보고서에는 정부의 10년 이상 재정정책 장기 목표를 설명하고 단기 재정목표와 합치되는 수정된 경제 및 재정전망도 포함

● 뉴질랜드 정부의 재정개혁과 성과

- ▶ 정부의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재정관리 노력으로 지난해 18억 달러의 재정수지흑자를 기록했고 GDP 대비 신규채무 비율은 감소
-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자재정 운영을 지속하면서 2010과 2011년 적자규모는 184억 달러로 정점에 달함
- ▶ 재정운영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
 - 공공부문과 개별 프로그램 지출 전반에 걸쳐 지출 효율성 제고
 - 뉴질랜드 기초노령연금펀드(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NZS Fund) 기여금 납입 일시 중단(2020/21년부터 재개 예정)
 - 2012~15년까지 예산에서 자본지출은 신규 차입 없이 조달

• 뉴질랜드의 자본지출 조정(capital recycling)을 통한 자본지출 조달 •

- 예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본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capital reprioritisation)하거나 연간 50억 ~70억 달러의 정부 출자 배당금(government share offers)을 활용해 투자를 지속하는 개념의 자본지출 조정을 2011년부터 실시
- 장점 : 추가적인 부채 차입이나 신규 세원 확보 없이 자본지출 가능
- 효과 : 2011~2016년 간 자본지출을 연간 총액 40억 달러, 신규 지출 4억 달러 이하로 억제했으나 같은 기간 뉴질랜드 정부보유 총 자산가치는 223억 달러에서 279억 달러로 증가

【작성】

박정수 부연구위원
mymajesty@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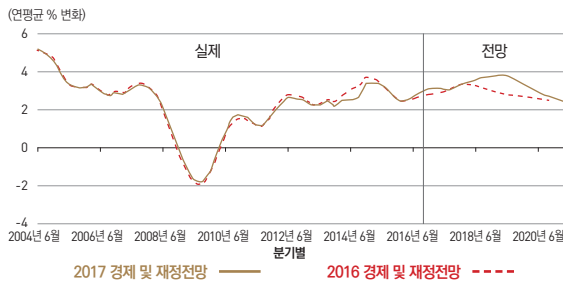
강나연 연구원
nykang@kpfis.kr

1) 뉴질랜드 재무부

● 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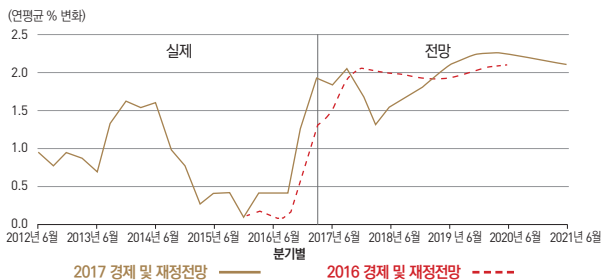
- ▶ 수출(특히 관광업)과 건설경기 호조, 이민 증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경제전망은 긍정적
- ▶ 경제성장률은 2016년 3.1%였고 향후 4년 동안 3%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 고용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실업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하여 2020년 평균임금은 6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평균임금은 2012년 40,000달러, 2016년 58,000달러 수준
- ▶ 전망기간(2020/21까지) 동안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이전보다 확대될 것이나 연간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 브렉시트, 중국경제 불균형, 미국의 경제·무역·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함에 따라 재무부는 종합적으로 재정정책을 보수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그림 1. 경제성장률 추이



※출처: 뉴질랜드 통계청, 재무부

그림 2.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출처: 뉴질랜드 통계청, 재무부

〈표 1〉 경제전망 요약

6/30일 종료 회계연도 기준	2016	2017 전망	2018 전망	2019 전망	2020 전망	2021 전망
경제성장률(연평균%)	2.7	3.1	3.5	3.8	2.9	2.4
소비자 물가상승률(연간%)	0.4	1.8	1.6	2.1	2.2	2.1
실업률(2분기)	5.0	5.0	5.0	4.6	4.3	4.3
경상수지(GDP 대비 비중, %)	-2.9	-2.8	-3.0	-3.3	-3.7	-3.9

※출처: 뉴질랜드 통계청, 재무부



해외 재정 동향



해외 재정 동향

● 정부의 재정 운용목표

- ▶ **장기 목표:** 2025년까지 GDP 대비 순채무비율을 10~15% 수준으로 감축하고, GDP 대비 정부지출(core Crown expenses) 비율을 30%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초노령연금 기여금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수지를 유지
- ▶ **단기 목표:** 새로운 채무 목표를 반영하고 추가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기 우선순위를 설정
 - 현금 여유분으로 명목 순채무를 감축하기 위해 2020/21년까지 재정수지(Operating balance before gains and losses, OBEGAL) 흑자의 증가 추세를 유지
 - 2020/21년까지 GDP 대비 20% 수준으로 순채무를 감축
 - 국가 성장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투자
 - 가계소득을 증진하고 소득세와 이전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조정

●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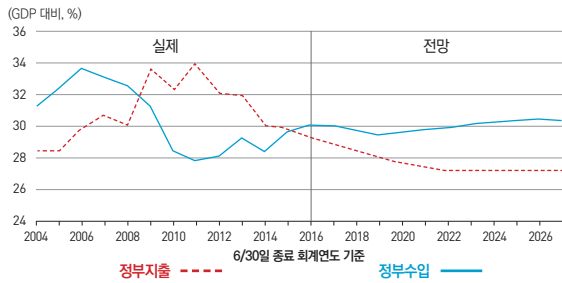
- ▶ 가족소득패키지(Family Incomes Package)²⁾의 세액 및 소득공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GDP 대비 정부수입(core Crown revenue) 비중은 30% 이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정부지출(Core Crown Expenses) 규모는 증가할 것이나 GDP 대비 비중은 하락(2008/09년 33.6% → 2015/16년 29.2%)
- ▶ 재정수지(OBEGAL) 흑자는 2016/17년부터 증가하여 예상기간 말(2022년)에 72억 달러(GDP 대비 2.2% 수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2020/21년 이후 순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 재정수지 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2〉 재정전망 요약

10억 달러, 6/30일 종료 회계연도 기준	2016	2017 전망	2018 전망	2019 전망	2020 전망	2021 전망
재정수지	1.8	1.6	2.9	4.1	6.1	7.2
잉여현금	[1.3]	0.1	[1.8]	[1.6]	[1.8]	1.4
순국가채무	61.9	62.3	64.1	65.7	64.2	62.8
국영기업지분을 포함한 국가 순자산	89.4	100.0	105.6	112.6	122.1	133.0
정부지출	73.9	77.5	80.5	83.5	86.2	89.2
정부수입	76.1	80.8	83.8	87.5	92.5	96.8
GDP 대비 비중, %, 6/30일 종료 회계연도 기준						
재정수지	0.7	0.6	1.0	1.4	2.0	2.2
잉여현금	[0.5]	0.0	[0.6]	[0.5]	0.5	0.4
순국가채무	24.4	23.2	22.8	22.1	20.6	19.3
국영기업지분을 포함한 국가 순자산	35.3	37.2	37.5	37.9	39.2	40.9
정부지출	29.2	28.8	28.6	28.1	27.7	27.5
정부수입	30.1	30.0	29.7	29.5	29.7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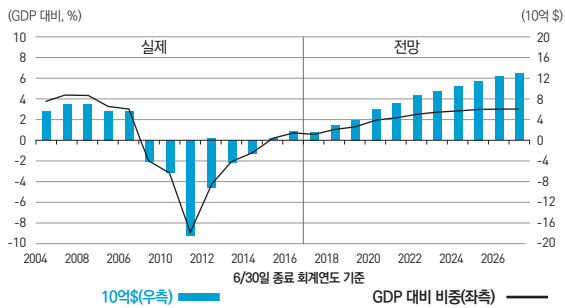
※출처 : 재무부

그림 3. 정부수입 및 지출



※출처: 재무부

그림 4. 재정수지



※출처: 재무부

● 정부 수입과 지출관리

- ▶ 인구 증가,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 경제 왜곡, 조세 회피와 탈세를 최소화하도록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시스템을 추구

◆ 시사점 ◆

자본지출 관리, 지출 효율성 제고와 같은 재정 구조조정은 미래의 더 많은 복지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됨. 우리나라 역시 향후 재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2)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계의 생계비를 보조하고 높은 거주비를 부담하는 서민층의 소득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로 20억 달러가 소요됨. 학생의 주거비 보조, 주급 25~75\$인 2인 가구 거주시설 보충, 가족 세액공제 확대, 1인 근로자 세액공제, 세율구간의 변경 등으로 구성되며 2018년 4월부터 실시



해외 재정 동향



해외 재정 동향

일본 내각부, 중장기 경제 및 재정전망 자료 발간

- Cabinet Office³⁾,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for Medium to Long Term Analysis (2017. 7. 18.)

● 일본 내각부 발간 2020년도 경제전망 개요

- ▶ 일본정부는 '경제 활성화 없이는 재정 건전화도 없다'는 원칙 아래 GDP 600조 엔과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개혁을 수행하고 있음⁴⁾

● 거시경제 시나리오

- ▶ 경제 활성화 시나리오(Economic Revitalization case): 적극적 경제재정정책의 효과로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기 이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
- ▶ 기본 시나리오(Baseline case): 일본경제가 현재의 잠재성장률을 유지
- ▶ 소비세 인상에서 오는 직접효과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장기에 걸쳐 2% 수준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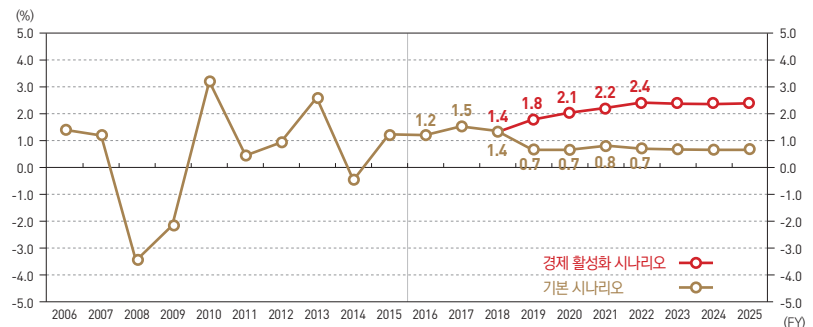
〈표 4〉 시나리오 주요 가정

		경제 활성화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주요 가정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016년 0.6%에서 2020년대 초까지 2.2% 수준으로 회복*	·2020년대 초반까지 1.0% 수준으로 수렴
	노동참여율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증가**	·현재 수준을 유지
	세계경제성장률	·IMF, OECD 전망에 근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3~3.4% 수준 유지	·IMF, OECD 전망보다 0.6%p 낮은 2.7% 수준을 유지
전망	실질경제성장률	·중장기에 걸쳐 연간 2%를 상회할 것	·중장기에 걸쳐 0%
	명목성장률	·3% 이상	·1% 초반

*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기 전인 1983년~93년까지 역사적 평균값

** 일본의 공식 노동의 수급 추정에 근거하며, 주로 노령층 및 여성의 참여 확대로 증가 예상

그림 5. 경제성장률





해외 재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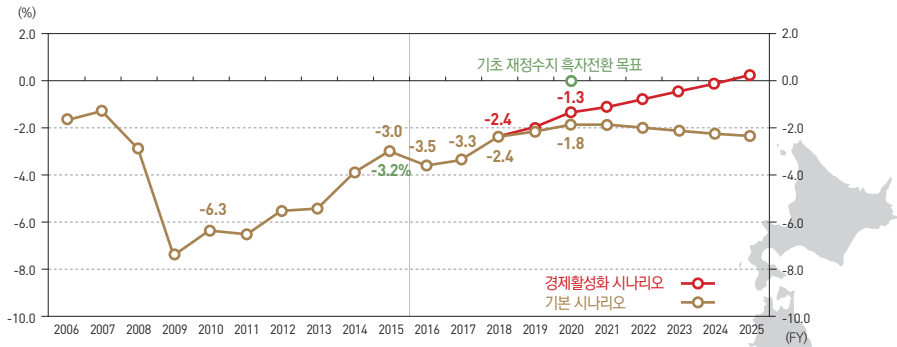
● 경제 활성화 및 재정 건전화 진척 상황

- ▶ 2014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으나 2015, 2016년에는 1.2%까지 상승, 2017년에는 경기회복의 확장세에 따라 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 2013~2017년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은 2.2% 수준이었음
- ▶ 2010년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6.3%에서 2015년 3.0%로 감소하여, GDP 대비 중앙·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적자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당초 목표를 달성
- ▶ 엔화가치 절상으로 기업 수익이 악화, 이로 인한 세입 감소로 2016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5%로 증가하고 2017년에는 3.3% 수준을 예상
- ▶ 저금리와 재정건전화 기초의 영향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2~2017년에점진적으로 10%p 상승

● 재정수지 전망

- ▶ 경제 활성화 시나리오에서 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GDP 대비 2.4% 수준인 134조 엔에 달한 이후 2020년에 GDP 대비 1.3% 수준인 82조 엔으로 감소
- ▶ 경기 회복과 '경제·재정일체개혁' 추진이 병행될 경우 2025년 전후로 재정수지 적자가 해소

그림 6. 중앙 및 지방정부 기초재정수지 합계



3) 일본 내각

- 4) 경제·재정일체개혁(Integrated Economic and Fiscal Reforms; 経済・財政一体改革).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16~'20 중기 계획으로 실시 중인 포괄적인 경제, 재정 개혁. 디플레이션 극복과 경기 회복,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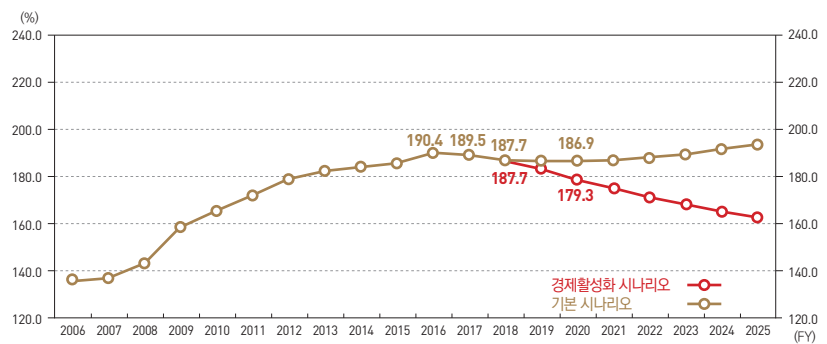


해외 재정 동향

● 국가채무 전망

- ▶ 경제 활성화 시나리오 하에서 GDP 대비 발행채무 비율은 2017년 189.5%에서 2025년 160% 대로 감소
 - 그러나 2024년 이후 장기금리가 명목GDP성장률보다 높아짐에 따라 현재 저금리로 발행된 기존 채권들은 점차 고금리로 대체 발행되어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2021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경제·재정 일체개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그림 7. 국가채무(명목GDP 대비 비중)



*지출과 회복 및 재건 정책에 소요되는 재정비용은 국가 채무에서 제외

◆ 시사점 ◆

재정개혁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경제 상황에 맞게 추진되어야 함. 경기 회복은 재정적자 완화 등 개혁 목표에 도움이 되지만 회복세가 더딜 수도 있으며 더 강력한 개혁 수단이 필요할 수 있음

캐나다 의회예산처, 경제 및 재정전망 발표

- PBO⁵⁾,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 4. 28.)

● 경제 전망

- ▶ 2016년 하반기 분기별 평균 경제성장률은 3.2%로 이전 전망치(10월 전망치는 2.7%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캐나다는 4월, 10월 연 2회 경제 및 재정전망을 발표

*의회예산처의 전망은 정부 전망과 비교해 볼 때 위험 조정, 데이터 등에 차이가 있으며 2017년도 전망은 상방위험, 국민계정 데이터 등의 차이로 의회예산처 전망치가 정부 전망치보다 높음

〈표 5〉 의회예산처와 정부의 경제전망 비교

경제성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년 예산 전망	1.3	1.9	2.0	1.7	1.7	1.8
2017년 4월 PBO 전망	1.4	2.5	2.1	1.9	1.7	1.6

- ▶ 지속적인 가계소비와 순수출의 증가가 경제 성장을 견인
 - 정부의 인프라 지출과 민간 소비지출 증가에 따라 2017년 상반기 기준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2.7%로 예상
 - 기업투자는 1분기에 감소한 후 연말까지 급격히 반등할 것으로 전망
- ▶ 캐나다 경제성장률은 2016년 1.4%에서 반등하여 2017년 2.5%, 2018년 2.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7~21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 수준을 유지

● 대외 경제 여건

- ▶ IMF의 성장 전망치 상향 조정 등 세계경제는 회복될 전망이며, 선진국의 성장세가 특히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 미국경제는 2017년 2.3%, 2018년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의 경제 회복은 수출 증가 등 캐나다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금리를 인상한 바 있으며,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캐나다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
- ▶ PBO는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캐나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대미 수출 증가로 상쇄, 중립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 ▶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등도 위험 요인임

〈표 6〉 캐나다 경제전망

	2016	2017	2018	2019-2021
경제성장률(%)	1.4	2.5	2.1	1.7
명목 GDP(10억 달러)	2,027	2,135	2,222	2,395

※출처 : 캐나다 통계청, 의회예산처



해외 재정 동향

GLOBAL FISCAL TRENDS



해외 재정 동향

● 재정전망

- ▶ 2016~17년 재정적자는 2016년 10월 전망보다 16억 달러 축소된 207억 달러(GDP의 1%)로 예상
- ▶ 2016년 4월~17년 1월까지 재정 수입이 예상보다 증가했고 인프라 지출은 예상보다 감소
- ▶ 소득세입은 감소했는데 소득세율 최고 구간 33% 세율 구간이 2016년에 신설되어 납세자들이 전년도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투자 및 배당소득을 앞당겨 신고했기 때문으로 분석
 - 캐나다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29%였으나 33% 구간 신설(2016년)

〈표 7〉 캐나다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기존(2015년까지 적용)		개정(2016년부터 적용)	
과세표준(CAD)	세율	과세표준(CAD)	세율
~\$44,701	15%	~\$45,282	15%
\$44,702~\$89,401	22%	\$45,283~\$90,563	20.5%
\$89,402~\$138,586	26%	\$90,564~\$140,388	26%
\$138,587 이상	29%	\$140,389~\$200,000	29%
		\$200,001 이상	33%

- ▶ 유가 하락 등 기업 수익 악화 요인⁶⁾이 있으나 법인세는 증가

〈표 8〉 2016, 2017년 예상 정부 재무 결과

	PBO			
	10억\$	2016년 10월	2017년 4월	차이
수입				
소득세		190.2	193.6	3.4
소비세		50.3	51.6	1.3
고용보험료 수입		23.7	23.1	-0.5
기타 수입		28.7	28.7	0.1
총수입		292.8	297.1	4.3
프로그램 지출				
개인 이전 지출		90.4	91.1	0.7
교부금		68.7	68.6	-0.2
직접 프로그램 지출		132.1	134.3	2.1
총 프로그램 지출		291.3	294.0	2.7
이자 지출		24.0	23.9	-0.1
총지출		315.2	317.9	2.6
재정수지		-22.4	-20.7	1.6
연방채무(GDP 대비 비율, %)		31.7	31.3	-0.4

※출처 : 캐나다 재무부, 의회예산처

▶ 2017/18년부터 2021/22년까지 재정적자의 뚜렷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표 9〉 재정전망 요약

10억\$	전망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2021~ 2022
재정수입	295.5	297.1	304.6	319.1	334.0	348.8	364.5
프로그램 지출	270.8	294.0	304.5	321.4	318.7	328.3	339.2
이자 지출	25.6	23.9	24.7	27.6	31.5	34.5	36.5
총지출	296.4	317.9	329.2	340.0	350.2	362.8	375.7
재정수지	-1.0	-20.7	-24.6	-20.9	-16.2	-14.1	-11.2
재정수지(GDP 대비 비중, %)	0.0	-1.0	-1.2	-0.9	-0.7	-0.6	-0.4
연방채무(GDP 대비 비중, %)	31.1	31.3	30.9	30.6	30.1	29.6	29.0

※출처 : 캐나다 재무부, 의회예산처

▶ **수입 측면** : 이전 전망에 비해 2017~18년부터 2021~22년까지 연간 18억 달러 수입이 증가할 전망

- 소득세의 감소 추세에 따라 소득세수는 당초보다 연평균 6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반면 법인세입은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꾸준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전망 대비 연평균 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용보험료 수입은 2018년 증가 예상

▶ **지출 측면** : 작년 10월 전망에 비해 총지출이 2017/18년부터 2021/22년까지 연평균 4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

- 2020년부터 아동수당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킴에 따라 2021/22년까지 14억 달러의 추가지출이 소요
- 고용보험 프로그램 수혜 자격 변화와 노동시장 개발협정(Labor Market Development Agreements) 확대(연간 12억 달러에서 2017/18년부터 18억 달러로 증액)로 매년 4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 고용보험 지출이 필요
-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금리와 예측 모델의 개선으로 인해 정부채무 이자 지출도 1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경제성장세가 안정적일 때는 정부 수입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움. 이에 반해 고령화 및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정부지출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재정적자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6) 유가하락은 캐나다 에너지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투자 감소, 수출 부진을 야기함. 캐나다 중앙은행은 국제 유가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국인 캐나다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유가하락 시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늘고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유가하락은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평가한 바 있음



해외 재정 동향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을 위한 전자정부 역량강화 연수

- 한국재정정보원은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ICT관련 선임연구원 및 중간관리자로 구성된 한국 전자정부 역량강화 연수단(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주관)을 대상으로 8월 2일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ICC)에서 강의를 실시
- 한국의 dBrain시스템 구축 과정 및 경험에 대한 강의와 우즈베키스탄 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 향후 재정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에 기여

dBrain시스템 개선 및 열린재정재정분석시스템 고도화사업 본격 추진

- dBrain운영본부는 8월 8일 정보원과 사업 수행사의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한 업무 분석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분석 결과 검토 및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재정수반법률 및 재정용자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시스템을 9월 초에 1차적으로 개통

아제르바이잔 공공서비스 및 사회혁신 역량강화 연수

- 한국재정정보원은 아제르바이잔 공공서비스(ASAN 센터)를 운영하는 SAPSI*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 전자정부 역량강화 연수단(고려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을 대상으로 8월 23일 한국의 dBrain시스템 관련 강의를 실시

* State Agency for Public Service and Social Innovations : 2012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공공서비스센터 운영 및 정부 전산화 촉진 업무 담당

- 강의 이후 다수의 질의를 통해 양국 간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하는 등 간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아제르바이잔 재정정보공개분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의미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

국유재산관리와 공간정보에 관한 IT 기술 세미나 개최

- dBrain 운영본부는 8월 29일 '국유재산관리와 공간정보'를 주제로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
※ 발표: 서동조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공간정보의 기본 개념과 다양한 국·내외의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
- 아울러 공간정보와 드론, 인공지능, Io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현재의 기술 수준을 설명하고, 향후 국유재산관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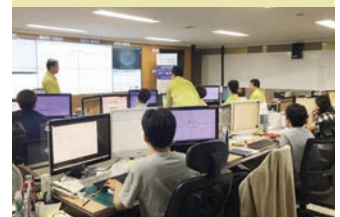
e나라도움 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련 영향평가 추진 계획

-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e나라도움 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
- 이번 조치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 등 효과를 기대

2017년 을지연습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진행

- 사이버안전센터는 7~8월 중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등 재정경제부문 등을 대상으로 APT공격, 해킹메일, 전산망 공격 등의 실전훈련과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위기 관리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도상훈련을 진행

KPFIS NEWS



희망주는 국고보조
믿음주는 투명관리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하고 열린 정부의 시작!
투명하고 꼼꼼한 관리로 국고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시스템

보조사업의 모든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에게 맞는 보조사업 맞춤형 검색
- 보조사업자 공모현황에 대한 통합 검색, 보조사업 집행현황 및 통계공개
- 질의응답, 정책제안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참여와 소통 채널

세금낭비 방지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고
정확해졌습니다

- 보조사업 7단계(신청/집행/사후)검증으로 중복·부정수급 방지
- 보조금 통합예치, 지출증빙자료 검증 후 실시간 집행
- 보조사업 전 처리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행정

복잡한 보조금 업무가 표준화,
자동화 되었습니다

- 정산보고 자동화 등 수작업 대폭 감소
- 행정관청 방문없이 보조사업 응모 가능
- 자료분석으로 과학적 보조금 정책지원

희망주는 국고보조, 믿음주는 투명관리, e나라도움(www.gosims.go.kr)이 국민과 함께 합니다

※ e나라도움 관련 문의는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국번없이) 1670-9595(국고국고)

월간
**나라
재정** 2017년 9월호 통권 제9호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이원식(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본부장)
편집위원 강영규(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최병호(부산대학교 교수)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연훈수(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박소영(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승희(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김도일(한국재정정보원 연구원)

디자인·제작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